

# 김기현 지도부, 지지율 '흔들'... 민생행보·여론전 총력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근로제 개편안 등 해명  
내일 MZ세대 노조 '맥주 회동'  
야당 중심 대일 비판여론 반박

국민의힘이 근로시간제 개편안, 한일정상회담 관련 논란으로 인한 비판 여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주69시간' 논란이 불거지자 적극적인 해명을 하는 한편, 보안 대책도 마련에도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한일정상회담을 둘러싼 '친일' 논란에도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대응하고 있다. 최근 당 지지율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기관 알앤씨치가 뉴스핌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4명에게 실시해 22일 발표한 국민의힘 지지율(3월 19~20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은 38.7%였다. 같은 조사에서 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 답변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시스

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5.3%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격차는 직전 조사(3월 12~13일, 9.7%포인트)보다 좁혀진 6.6%포인트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민주당은 2.4%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의 경우 0.7%포인트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은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여론조사 결과 ▲60세

이상(56.3%, 5.1%포인트 ↑) ▲대구·경북(53.9%, 2.2%포인트 ↑) ▲부산·울산·경남(49.5%, 2.2%포인트 ↑) 등 전통적인 지지층 중심으로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면서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인 여론조사도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3명에게 실시해 22일 발표한 국민의힘 지지율(3월 19~20

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은 36.3%였다. 이는 직전 조사(3월 11~13일)과 비교하면 2.0%포인트 내린 결과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5.7%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율은 0.1%포인트 올랐다. 해당 조사에서 양당 지지율 격차는 9.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의 당 지지율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근로시간 개편이나 한일정상회담 관련 논란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당은 관련 논란 해명에 집중하고 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 정부·여당, 대통령의 입장이 엇갈린다는 지적에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 사이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다 합리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잘 보장하고 쉬는 시간도 잘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그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인 김병민·장예찬 최고위원도 오는 24일 MZ세대 노동조합과 ‘맥주 회동’을 한다. 최근의 논란을 수습하는 한편, 의견도 청취할 것이라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열어 MZ세대 의견 등에 대해 청취한 바 있다.

이 밖에 한일정상회담 관련 야당 중심의 반일 비판 여론에 대해 윤상현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정적 평가가 많은데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하나’는 취지의 질문에 “개선된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 국민의 80%가 한일관계 정상화에 반대했으나 결국 이 결단을 여야가 칭송한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별위원회’ 출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모두 건강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데이터 기반 경제 분석 전문가인 이수형 경제·계층분과위원을 위원장으로, 노동·건강·복지·경제정책 등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9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모두 건강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데이터 기반 경제 분석 전문가인 이수형 경제·계층분과위원을 위원장으로, 노동·건강·복지·경제정책 등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9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국민통합위원회

## 민주당, 당헌 유권해석... 대표 직무정지 귀추

檢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당헌 80조 논의... 친명-비명 이견

검찰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당헌 제80조 적용 여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수차례 말했던 것처럼 답정기소(답을 정해 놓은 기소)다.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소와 체포 영장 표를 벌이면서 시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요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최고위원회의

에서는 당헌 23조 1항과 80조 3항에 따라 당헌 80조 유권해석의 건을 차기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하고 차기 당무위를 이날 오후 5시에 당대표실에서 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헌 제80조는 당사무총장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제80조 3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만들어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지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예고하고, 언론에 공소장 내용을 슬슬 흘리며 다시 균형을 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이재명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헌 80조 적용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결과를 정해놓고 적용 여부를 짜맞추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 쌀값 정상화 지지부진... 양곡법 ‘누더기’ 전략

여야, 개정안 처리 두고 줄다리기  
농민단체 반발... 전면 개정 촉구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개정안이 사실상 누더기 법안이 됐다.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산지 쌀값(20kg 기준)이 전년(2021년) 수확기 대비 20.6%가 하락하는 등 가격 폭락 사태가 이어지자 정치권 논의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올랐다.

지난해 8월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돼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등에는 의무적으로 초과생산량의 일부를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공급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 및 쌀값의 지속적 하락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재



하원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현행 양곡관리법보다 후퇴한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원(매년 1조원 이상)의 소요 ▲식량안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등을 주요 반대 사유로 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 같은 의견 차이로 여야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본회의에 직회부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의무매입 조건을 강화하는 1, 2차 중재안을 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의무매입 조항이 남아있을 경우 수용할 수 없다는 입

장이며, 민주당은 김 의장의 1차 중재안을 수용한 만큼 ‘의무매입’ 조항이 유명 무실해지는 2차 중재안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김 의장의 1차 중재안을 반영한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편, 농민단체는 법안이 누더기가 됐다며 반발에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22일 김 의장의 2차 중재안을 정면 비판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는 중재와 합의를 집어치우고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라”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장혜영 유일 반대 “대기업 세액공제 상승”

〈정의당 의원〉

>> 1면 ‘반도체 육성 빨라...’서 계속

홍영표·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공장을 전기차 활용 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시설투자 세액공제하도록 해 대량 실업상태를 막아야 한다고 추 부총리에게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하이퍼트브, 항공우주 등 투자금이 막대하게 필요한 미래형 이동수단 지원에도 기재부

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배준영 의원은 “미래로 갈수록 산업과 기술이 복잡 다단해지면서 칸막이가 없어지고 있다. 현재 도심항공교통(UAM)이나 개인용 비행체(PAV) 등을 이야기 하는데, 시속 1200km로 서울-전주를 주파하는 하이퍼트브도 미래형 이동수단”이라면서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에 항공우주라고 돼 있는데, 항공우주 산업은 반드시 성공 담보가 안되기 때문에 투자

를 많이 해야 한다. 투자를 많이해서 실질 입을 가능성도 많다.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미래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때, 너무 항공우주분야에 칸막이를 치지 말고 동일 잣대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K-칩스법 표결 과정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며, “작년(정기국회)에 (대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6%에서 8%로 올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 마디로 다시 상생시켜줬다”고 비판했다.

/박태홍 기자